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채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채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 내달 4일 조기환급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짝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

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세법개정, '청년결혼자금 1.5억 공제' 등... 올해도 기업 감세 주력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상위 10% 결혼 자녀 공제로 불리는 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추진 중이다.

가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가 부모님을 합칠 경우 3억원 공제에 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나뉜 부동산 투기 제도 완화와 맞물려 있다.